

민주노총 본부 침탈은 노동자 운동에 대한 전쟁 선포다

22일,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 본부를 폭력 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노총 창립 이래 초유의 일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말대로 민주노총 본부 침탈은 “전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전쟁 선포”다.

경찰은 수색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했다. 중무장 병력을 6천5백 명이나 동원해, 1층 유리문을 깨부수고 최루액까지 난사하며 14층까지 밀고 들어왔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회원들은 이를 밤을 꼬박 새며 경찰 진압에 격렬히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2백 명이 넘게 연행됐다.

이 건물은 오래돼 통로가 비좁고 난간이 약해 자칫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의 악몽이 떠오를 만했다.

이런 무리한 체포 작전은 한국의 통치 관행으로 보건대 청와대의 지시나 동의 없이 이뤄졌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불통

경찰은 장장 10시간 동안 민주노총 건물을 뒤졌지만 결국 철도 노조 간부를 단 한 명도 체포하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통쾌해하며 “닭근혜”를 조롱했다.

경찰이 물러나고 끝까지 건물 안에서 저항했던 철도 노동자들이 지부 깃발을 흔들며 건물 밖 항의 집회 대열에 합류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부산과 대구,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는 분노한 노동자들이 새누리당사와 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고 거리 행진을 벌였다.

폭력 침탈 그 순간에도 국토부와 안행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 파업에 대해



“실체도 없는 민영화 주장”이라고 우겼다.

그러나 부총리 현오석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기업이, 공공부문이 운영하기 부족한 경우에 민

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사실상 철도 민영화 계획을 인정한 바 있다.

물론 다음날 국토부장관 서승환이 서둘러 수습하고자, “민간에 지분 매각하면

면허를 박탈하겠다”며 소위 ‘민영화 방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스스로 법도 안 지키는 정부가 하물며 구두로 하는 약속을 믿을 수는 없다.

면허 박탈 약속은 아무 강제력 없는 부도수표일 뿐이다. 한 철도 노동자의 말처럼 세입자에게 “확정일자 받지 말라”는 것과 같다.

“찬물이 아니라 기름 부은 것”

박근혜 정부의 강경 대응은 그들의 위기 의식을 반영한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전 주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철도 민영화 논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민주노총 침탈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를 더 심화·확대시키고 있다. 공지영 씨는 1979년 YH 사건이 떠오른다고 했다. 작가 99명은 22일 성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은 우리의 삶을 더럽히기 위해 온갖 일들을 무모하게, 무자비하게, 반상식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폭넓은 대중적 지지 속에서 조합원들의 사기도 꺾이지 않았다. 침탈 규탄 집회에서 철도 노동자들은 “정부는 찬물을 끼얹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것”이라며 투지를 다졌다.

물론 초유의 민주노총 본부 침탈 감행이 보여 주듯, 박근혜 정부는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철도 파업이 가져온 위기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온 힘을 다해 파업을 파괴하려 할 것이다.

투쟁의 판돈이 돌연 커졌다. 노동운동도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설 수 있도록 저항의 수위를 높여 투쟁에 탄력을 더 붙여 나가야 한다.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선명 진보 신문

국제주의·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노동자 연대

레프트21

을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레프트21〉 철도 민영화 반대 특별 페이지
<http://left21.com/nosale>

<http://www.left21.com>

나누고 싶은 투쟁 소식과 의견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전화: 02-2271-2395, 010-8908-7912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 연락처를 보내 주시면 〈레프트21〉의 철도 민영화 관련 기사를 보내 드립니다.

민주노총은 즉각 실질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민주노총 비상 증집은 어제(22일) “사 무실 침탈과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전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23일 확대간부파업, 28일 총파업과 100만 시민행동의 날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8일은 너무 늦다.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에서 철도 노동자들은 “우리가 28일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하고 탄식했다.

게다가 28일은 토요일이라 총파업이라는 이름에 값하는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물론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와 거리 시위는 필요하다. 그러나 초강경으로 나오는 박근혜 정부를 물러서게 하려면, 생산을 마비시킬 수 있는 노동자들의 힘을 이제는 사용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민주노총 본부 침탈에 맞서 민

주노총 지도부가 소속 조합원들의 힘을 총 동원해 저항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을 우습게 보고 파상공세를 계속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28일보다 일정을 당겨서 실질적인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 연맹들과 강력한 노조들은 이에 실질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이런 투쟁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영리병원 허용과 파견 확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대중의 것이다.

무엇보다 철도 파업에 연대해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지금 철도 파업은 계급 대리전이 돼 있다. 이제는 계급 '대리전이 아닌 계급 전체'의 전투로 확대돼야 한다.



철도 파업을 전면화해야 한다

6천 명의 경찰을 투입해 집행부를 체포하려 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철도 파업 파괴 공격이 극악한 상황에서도 파업 대열은 강고하다.

정부는 결국 지도부 체포에 실패했다. 그리고 무리하게 추진하던 수서발 KTX 면허 발급도 시한을 맞추지 못했다. 지금 사태는 정부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여기서 그칠 태세가 아니다. 박근혜가 괜히 우파들의 단합된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게 아니다. 정부는 철도 파업 파괴 공세와 수배 간부 체포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이번 주에 다소 연기된 면허권 발급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게다가 정부와 철도 공사는 외주화 등 일련의 구조조정 계획까지 내놓으며 분할 민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파업을 파괴하려고 철도공사는 23일 기관사 3백여 명, 열차승무원 2백여 명의 기간제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철도 파업을 분쇄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까지 침탈한 비상한 상황에서 철도 노조 지도부는 시급히 저항의 수위를 높여 대응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투사들은 박근혜 정부가 지도부를 체포하는 등 무리수를 두면 전면 파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탄압이 자동으로 투지를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철도 파업이 엄청난 대중적 지지

를 받고 있고 세력관계가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어서, 지금 노동자들은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투지를 보여 주고 있다.

사측이 엄청난 복귀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기관차지부들의 파업 복귀율은 1 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철도 공사가 발표하는 복귀율은 뺨뺨이다. 파업 초기 '사고지부'였던 안산승무지부의 조합원들은 지부 간부 없이 자발적으로 파업대오에 합류했다.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에서도 여러 철도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필공 조합원은 “이 투쟁은 전쟁이다. 필공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전면 [파업]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경찰의 침탈 때문에 평소에 나오지 않던 필공 조합원들까지 다 나왔다” 하고 말했다.

이처럼 조합원들의 정서와 노동계급의 전폭적 지지가 파업 참가자 측에 유리할 때 더 효과적인 전술을 과감하게 사용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사기나 좋은 정치적 지형은 무한정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파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때 기회를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

2002년 38일간 지속된 발전 파업 당시, 노동자들은 산개 전술 속에서도 상당 기간 자신감을 유지하며 세 차례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가운데 노조 지도부와와의 협상이 이뤄진 파업 말미에

는 조합원 총회가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다. 철도 투사들은 이런 경험에서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

파업에 대한 지지가 높고, 조직력이 취약했던 지부나 필공 조합원들까지 탄압을 각오하겠다는 분위기가 있는 지금, 파업을 전면화해야 한다. 그래야 세력관계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고 박근혜 정부를 한 발 물러서게 할 수 있다.

추천 소책자

※ 20권 이상 구입시 20퍼센트 할인



철도 민영화 반대 시리즈 2
철도 민영화, 재앙을 향한 탈선—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박설, 이정원 외 지음.
노동자연대다함께.
3,500원

구입 문의

02)2271-2395, 010-8908-7912

대체인력은 파업 파괴자다

철도 파업 열흘 만에 1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에는 사망 사고도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철도공사는 위험천만한 대체인력 투입을 지속하고 있다. 시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파업 파괴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대체인력 투입은 파업의 효과를 크게 제한하고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KTX와 전동차의 법적 필수 운행률은 각각 56.9퍼센트, 63퍼센트이지만, 파업 1주일 동안 대체인력 투입으로 모두 1백퍼센트 운행됐다. 2주차에 들어서야 10퍼센트 정도가 줄었다.

노동자들이 대체인력 투입을 막고

열차 운영을 중단·지연시킨다면, 파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 파업 참가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노동자들의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체인력을 저지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주요 역사와 차량기지 등을 점거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 은행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조흥은행 본점을 점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단호하게 나흘 동안 연좌 파업을 벌여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다.

(복수의) 거점 농성은 노동자들의 결속력과 사기를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다.